

재정정책의 평가*

박 기 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 서 론

2016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2016년도 예산을 통하여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 청년 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발표만 보고 약 400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의도한대로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판단을 하는 작업을 평가(evaluation)라고 말할 수 있다. 사전적으로 평가란 사물의 가치나 수준을 따져 보는 것을 의미하지만 평가에 대한 일치된 견해나 방법론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를 보는 것,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가치의 판단 등 평가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처럼 평가의 시점이 다를 수도 있고, 개별 사안 평가와 포괄적인 평가처럼 평가의 범위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에 대한 시각, 시점, 범위 등이 달라도 가능한 한 평가대상의 중요한 측면을 포괄하고, 체계적으로, 분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평가의 대상이 재정, 즉 정부의 재정운용이므로 정부의 자원 배분 및 조달의 핵심적 측면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Musgrave(1959)가 지목한 재정의 3가지 기능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resource allocation), 소득재분배(redistribution), 경제 안정(stabilization)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또한 자원의 배분, 재분배 및 재정 안정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실증적인 결과물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거나, 앞으로 진행될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방법을 사용한

* 본 원고는 2015년 8월 27일(목),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경제학회, 한국금융학회, 한국재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하계 정책심포지엄, 「한국 거시경제정책의 현황, 과제 그리고 미래」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다. 간단한 방식이 엄밀성에 있어서는 다소 취약할 수 있다. 그러나 간단한 방법은 비전문가도 사용할 수 있고, 분석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며, 최근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과 비교하여 결과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시간과 자료가 주어진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 또는 분석을 하여야 한다.

2. 자원의 효율적 배분

1) 지출 부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시장을 통해 달성된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부문에 지출을 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정부지출의 기능별 분류를 사용하여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 공공서비스 및 안전, SOC 부문에 대한 지출(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공공재 성격을 지닌 경제분야 지출) 추이를 살펴본다.²⁾³⁾

통합재정은 최신 자료가 없으므로 아래 <그림 1>은 통합재정자료가 아닌 정부 예산자료를 사용하여 예산 증가율 대비 분야별 지출의 증가율을 살펴본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 증가율은 정부가 특정 지출에 대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⁴⁾ 그림을 보면 국방 및 치안·안전 분야의 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 분야는 이전 정부에서는 강조되었지만 현 정부에서는 그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SOC 예산의 중요성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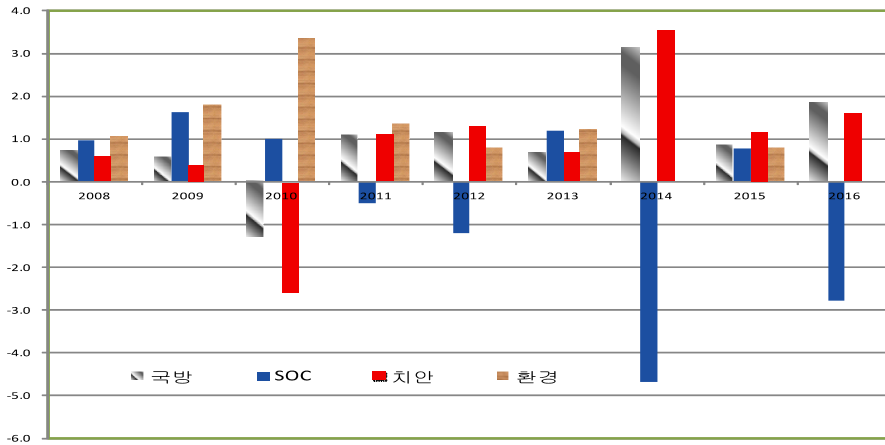
예산자료만을 가지고 공공분야의 과부족을 알기는 쉽지 않지만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의 선호와 정부의 지출이 일치하는가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은경(2015)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기준으로 국방에 대한 국민의 선호는 상대적으로 낮고, 보건 및 환경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선호에 비추어 보면 최근의 국방 및 안전 관련 지출의 증가율은 다소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선호도 조사가 매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판단 기준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지출의 과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추가적인 정보로는 범죄율, 주변국과의 충돌 위험성, 물류비용 등 다양한 지표가 있을 수 있다.

2) 정부기능은 일반 공공 서비스, 국방, 공공 질서 및 안전, 경제, 환경, 주택 및 지역 개발, 보건의료, 오락·문화·종교, 교육, 사회 보호의 10개 분야로 분류된다. 10개의 분류를 3개의 대분류로 압축하면 ① 일반행정분야(일반 공공서비스, 국방, 공공 질서 및 안전), ② 경제분야, ③ 사회분야(환경, 주택 및 지역 개발, 보건의료, 오락·휴양·문화, 종교, 교육, 사회 보호)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규모가 크므로 지방지원 및 기타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최근 자료를 이용할 수는 없다는 약점이 있지만 통합재정자료를 이용한 GDP 대비 지출 추이도 동일한 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다.

4) 통합재정과 달리 정부 예산은 보건·복지, 교육, 문화·체육, 환경, R&D, 산업 등, SOC, 농림·수산, 국방, 외교·통일, 치안·안전, 일반·지방행정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림 1> 유형별 지출의 평균 증가율 대비 증가율(예산 기준)



<표 1> 정부지출에 대한 분야별 선호

환경	보건	치안	교육	국방
1.199	1.310	1.028	1.146	0.603

주: 평균 대비 분야별 선호로 계산한 값, 이은경(2015) 참조.

2) 조세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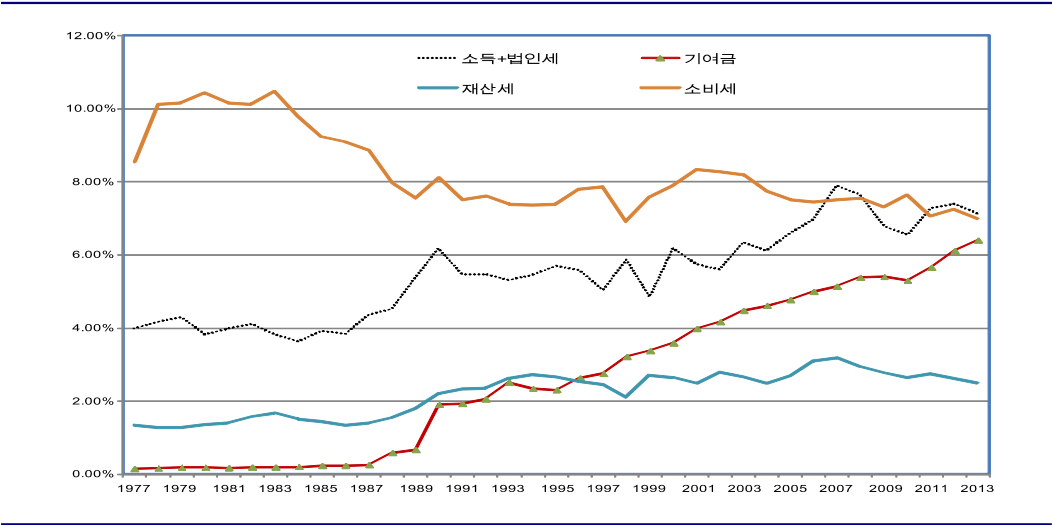
세입 부문도 경제적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비왜곡적인 조세(인두세 형태, 담배·술 등 소비세)로 재원을 조달하면 자원배분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다. 반면 자본(법인세 등)이나 노동(소득세)에 대한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면 자원배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한계효율비용(Marginal Efficiency Cost)으로 측정될 수 있다. 김승래·김우철(2007)의 연구에 따르면 한계효율비용은 자본과세(29.8%), 노동과세(21.2%), 일반소비과세(15.5%), 수입과세(9.6%)의 순서이다.

OECD revenue statistics의 한국자료를 이용하여 세수 추이를 보면 기여금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태이고, 개별소비세 비중이 하락하며 소비세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소득과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감소 또는 정체 상태이다. 재산관련 세금은 전체적으로 약한 증가세를 보이지만 최근에는 감소 추세이다. 따라서 추세를 보면 자본 및 노동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소비과세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세제의 한계효율비용은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GDP 대비 비율을 이용하여 소득세를 노동과세, 법인세를 자본과세로, 부가가치세를 일반소비세로 보고 2014년 실적치 대비 2015년 및 2016년 세입예산안에 한계효율비용을 적용해보면

2014년은 2.28%, 2015년은 2.26%, 2016년은 2.28%로 특별한 변화는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2014년 세제개편으로 담배가격을 2배 인상함에 따라 부담금을 포함한 약 5조원 수준의 세수 증대 분이 계산에서 제외되었고, 담배 관련 소비세가 비효율이 작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로 인한 한계효율비용이 조금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세목별 GDP 대비 비중 추이



3. 소득재분배

1) 조세 부문

재분배를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은 크게 사회보장제도와 누진적 조세제도로 구분된다. Sung & Park(2011)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의 상대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계산하여 보면 소득세는 소득 대비 부담 비율이 점점 커지므로 재분배 효과가 크고, 연금보험료도 소득 대비 부담 비율이 커지는 형태이므로 상당한 재분배 효과가 있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는 약간의 역진성을 보유하여 소득 대비 부담 비율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다소 작아지는 형태이다.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 부담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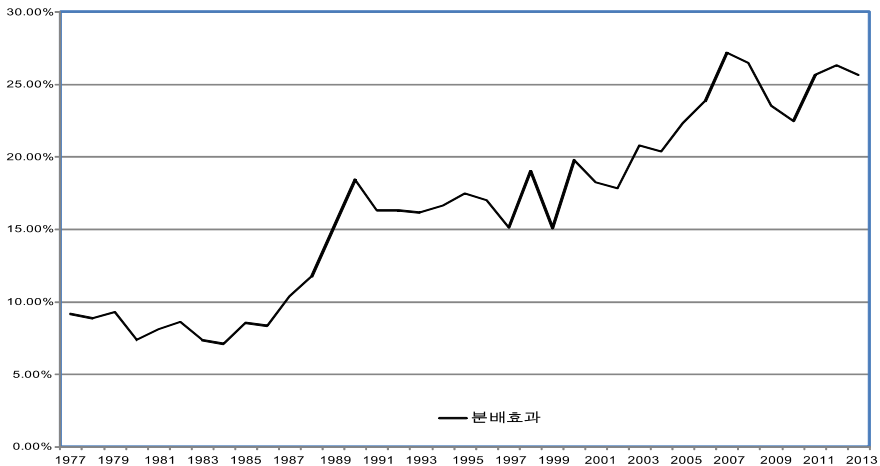
<표 2> 조세부담의 편차(5분위 기준)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연금보험료
3.591	-0.650	-0.600	-2.536	0.699

주: 소득 5분위로 구분하여 최고분위 및 최저 분위의 소득 대비 부담 비율을 차감한 다음에 평균 부담비율로 나눈 값.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기여금의 GDP 대비 비중에 조세부담의 편차를 곱하여 계산한 결과를 보면 소득 관련 조세의 비중이 증가하며 조세의 재분배효과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

<그림 3> 분배 효과 추이(조세)



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기여금의 GDP 대비 비중에 조세부담의 편차를 곱하여 계산한 값.

물론 일부 세목이 누락되었고, 조세부담의 편차가 이전과는 달라질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조세의 재분배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조세의 재분배 효과가 크게 개선되었는데, 1980년 후반에는 개별소비세 감소 및 국민연금의 도입이, 2000년대 초반에는 개별소비세 감소 및 법인세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최근 세제개편에서는 소득세 증가 등으로 일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소득 역진적인 담배 관련 과세의 급증으로 조세로 인한 재분배효과는 전체적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⁶⁾

2) 지출 부문

지출의 상대적 소득재분배 효과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정부지출은 가구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되므로 최저분위 수입에서 최고분위 수입을 차감한 값을 사용한다.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기초생활보장은 저소득 집중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적이전의 경우도 저소득층 집중도

5) 법인세의 경우에는 소득세의 값을 적용 (법인세가 주주에게 부담지우는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식보유 가치의 편차(그로 인한 소득편차)가 다른 소득의 편차보다 클 것이므로 소득세보다는 법인세가 더 재분배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6)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이며, 담배와 관련된 개별소비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최근 자료를 적용하지 못함.

가 크다. 교육의 경우에도 모든 가구에 거의 동일한 금액을 나누어 주므로 소득 대비로 보면 어느 정도 저소득층 집중성을 보유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한다. 의료의 경우에는 교육보다 고소득층 집중도가 크고, 연금은 편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행정, 국방 등 순수공공재는 박기백·김진·전병목(2004)의 계산에 따라 혜택의 소득탄력성 1.164를 적용하면 상대적 격차의 값은 -0.446으로 계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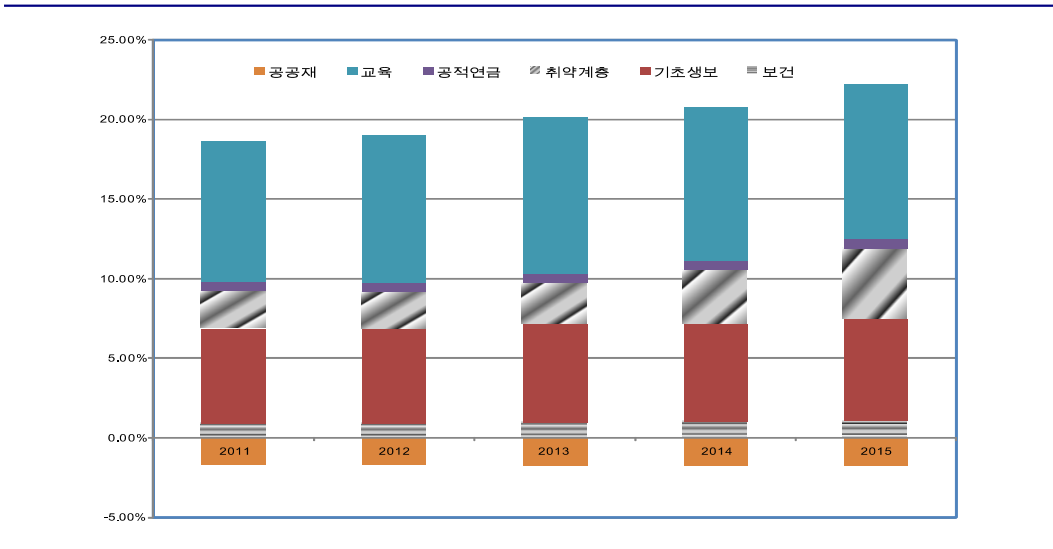
<표 3> 정부지출의 편차(5분위 기준)

공적연금	공적이전	기초생보	의료	교육
0.242	5.791	10.000	1.535	2.714

주: 소득 5분위로 구분하여 최고분위 및 최저 분위의 소득 대비 부담 비율을 차감한 다음에 평균 부담비율로 나눈 값. 부호는 부담의 경우와는 반대로 설정.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서 재분배에 대한 효과가 커지고 있다. 최근의 경우를 보면 재분배 효과가 매우 큰 기초연금은 중앙정부 예산이 2013년 3조원 수준에서 2014년 5조원, 2015년 7.5조원으로 증가하였고, 반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도 안정적인 수준이므로 재분배에 대한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계산한 결과(그림 4)를 보면 정부지출로 인한 재분배 효과가 최근 개선되고 있다.⁷⁾

<그림 4> 분배 효과 추이(지출)



7) 순수공공재는 국방, 외교, 안전을 합한 것을 사용하였고, 예산상 취약계층지원 및 노인청소년 예산을 공적이전 효과로 계산하였다.

4. 경제안정

1) 경기조절

실제 재정수지는 재정정책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부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재정수지의 변화가 경기변동에 따른 변화인지 아니면 재정정책에 따른 변화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재정수지의 악화는 경기가 나빠져 발생할 수도 있고, 정부가 소비를 진작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임시투자세액감면처럼 의도적인 감세정책의 산물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를 경기변동적인 요소와 정책적인 요소로 구분하는 작업을 많이 한다. 대표적으로 재정충격지수, 구조적 재정수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지를 계산하는데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조세수입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수입 및 지출의 정확한 탄력성을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잠재GDP에 대한 추정 방법도 다양하다. 이러한 지표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고 하여도 해당 지표는 정부 당국의 의도 또는 재정정책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지 해당 지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예산안 발표 자료에 나오는 통합(관리) 재정수지를 사용한다. 통합재정수지의 재정적자는 비록 자동안정화장치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총 수요에 영향을 준 것이므로 재정이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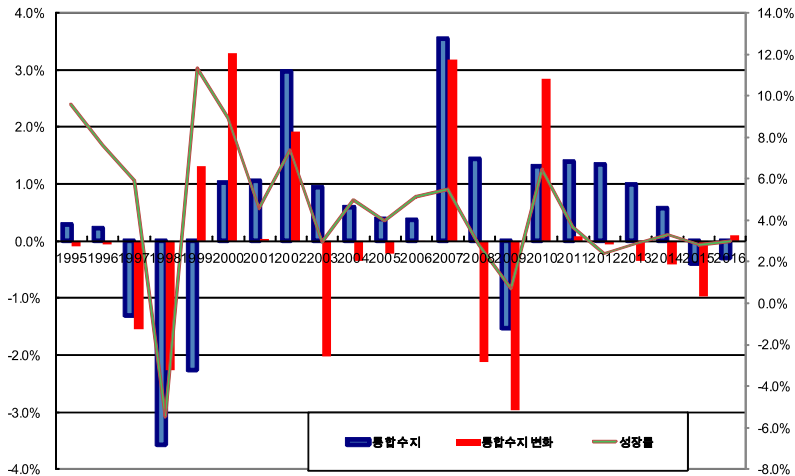
또 다른 문제는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적절한 지표를 찾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GDP gap 또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등이 사용되지만 GDP gap의 정확한 측정도 쉽지 않은 과제이다. 여기서는 성장을 또는 예상 성장률을 기준으로 재정정책을 살펴본다. 이는 심각한 불황이나 경기 과열 시점에만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시점에서 경기조절은 자동안정화로 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특별히 성장률이 높거나, 낮은 시점만 살펴 본다.

최근을 기준으로 보면 <그림 5>에 나타난 것처럼 2009년의 저성장에 대응하여 정부가 재정수지를 대규모 적자로 운영하고,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이전보다 커짐으로써 재정이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적절히 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경기가 좋았던 2010년에는 정부가 전년도에 비해 재정수지를 대폭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통합재정수지가 흑자가 됨으로써 재정이 경기조절 역할을 적절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는 3% 전후의 성장률이므로 재정으로 경기조절을 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점이다. 반면 2015년 올해는 통합재정이 적자이고, 이전보다 적자 규모를 대규모로 늘림으로써 재정이 경기부양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은 재정적자 규모를 올해보다 소폭 줄이고 있어서 긴축적인 기조이고, 다소 경기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8) 우리나라의 경우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사회보장기금의 흑자로 인하여 잘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수지 대신에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하거나 두 가지의 평균 등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5> 통합수지와 성장률



2) 재정 안정

안정적인 경제성장도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재정안정성을 살펴본다. 다시 말하면 재정의 안정이 거시경제의 안정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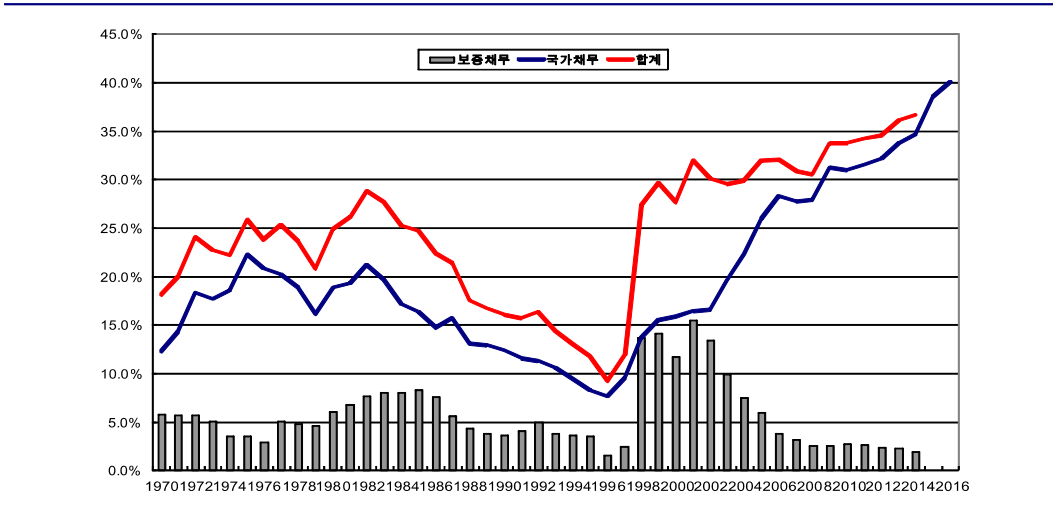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재정적자 또는 정부부채의 규모 자체가 재정적 부담을 의미하지는 않고, GDP 대비 부채비율이 재정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정부부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부부채(또는 보증채무를 합산)비율을 사용한다. Blanchard 등(1990)에 따르면 유지 가능한 재정정책이란 GDP 대비 부채비율이 원래 수준 또는 특정 수준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재정정책을 의미한다. Schick(2005)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지불능력(solveny), 성장(growth), 안정성(stability), 공정성(fairness)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Bohn 검정 등 다양한 재정안정성 검정방법이 있지만 해당 방법 모두 기본적으로는 GDP 대비 부채비율의 추이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부부채 비율이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하는지 여부를 재정안정성의 판단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2009년도 금융위기로 인하여 대규모 재정적자를 시현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대규모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 등 항구적이고, 대규모의 지출 증대가 이루어진 반면 이에 따르는 세입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래 <그림 6>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GDP 대비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08년 이후의 정부 재정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재정으로 인하여 경제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선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정적자는 해외부문에서 발생하는 과다한 흑자를 축소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외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있어도 외국 채권자의 상환 압박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 마지막으로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정부부문의 국채 발행으로 인한 구축효과가 작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 정부채무 추이



5. 요약 및 시사점

최근 정부가 2016년 예산안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정책을 재정의 3가지 기능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득재분배, 경제 안정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현재 진행되는 재정정책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고, 또한 스스로 분석할 수도 있도록 가능한 한 손쉬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는 국방 및 치안·안전 분야의 지출 비중을 높이고, SOC 예산의 비중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분이 적절한 것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일반 국민이 국방보다는 보건 및 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방 지출을 다소 축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입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장기여금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반면 개별소비세 비중이 하락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자본 및 노동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소비과세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세입 측면의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득재분배 측면을 보면 재분배효과가 큰 소득세, 법인세 및 기여금의 비중은 커지고,

소비세의 비중이 낮아지므로 조세로 인한 재분배효과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와 역진적인 담배 관련 과세의 급증으로 조세로 인한 재분배효과는 이전 보다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지출을 보면 복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정부지출로 인한 재분배 효과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 도입된 기초연금도 소득분배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재정수지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9년의 저성장에 대응하여 대규모 재정적자로 대응한 것은 적절한 재정정책으로 보인다. 경기가 다소 과열된 것으로 보이는 201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재정수지가 대규모로 개선되어 재정이 경기조절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은 재정적자 규모를 소폭 줄이고 있어서 긴축적인 기조이고, 다소 경기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로 재정안정성을 살펴보면 GDP 대비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08년 이후의 정부 재정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실현되고 있고,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부채로 인하여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하여 세입을 증가시키고, 지출의 증가세를 통제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문헌

- 김승래 · 김우철,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주요 세목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7.
- 김승래 · 송호신 · 김우철, 『부문별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9.
- 박기백 · 김진 · 전병목,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4.
- 박승준 · 이강구, 『재정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 - 자동안정화장치를 중심으로 -』, 국회예산정책처, 2011.
- 박형수, “OECD방식에 의한 우리나라 잠재GDP 추정,” 『재정포럼』, 5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2.
- 이은경,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선호 결정요인,” 『재정포럼』, 7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최준욱 · 류덕현 · 박형수,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 홍승현,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 분석: 재정기조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홍승현 · 류덕현 · 전병목 · 윤성주, 『경제성장과 재정정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Barro, R., “Government Spending in a Simple Model of Endogenous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 1990, pp.S103-S125.
- Barro, R. and X. Sala-i-Martin, “Public Finance in Models of Economic Growth,” *Review of Economic Studies*, #59, 1995, pp.645-661.
- Blanchard, O. J., “Suggestions for a New Set of Fiscal Indicators,” OECD Working Papers No. 79, OECD, 1990.
- Blanchard, Oliver, Jean-Claude Chouraqui, Robert P. Hagemann and Nicola Sartor, “The Sustainability of Fiscal Policy: New Answers to An Old Question,” OECD Economic Studies, No. 15, OECD, 1990.

- Bohn, Henning, "The Behavior of U. S. Public Debt and Deficit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98, pp.949–963.
- Elmendorf, D. and G. Mankiw, "Government Debt," *NBER Working Paper*, No. 6470, 1998.
- Musgrave, R.,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McGraw–Hill, 1959.
- OECD, Program Evaluation, PUMA/SBO(97), 1997.
- Schick, Allen, "Sustainable Budget Policy: Concepts and Approache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 5, No. 1, OECD, 2005.
- Sung, M. and K. Park,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Review of Income and Wealth*, 2011, pp.345–363.